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펼쳐

김일재 행정부지사 등 지휘부, 부처예산에 도정현안·핵심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전북도는 2018년 국가예산 주요사업의 반영을 위해 부처예산 편성 전 지휘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총 출동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2일 부처방문에 이어 4일 새만금개발청과, 국토부, 복지부, 기재부, 문체부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도정 현안사업과 국가예산 중점사업에 대해 사업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현재 기재부는 3월 31일 각 부처에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한 상태로 오는 24일경 부처별 한도에(실린)을 결정해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송하진 지사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부처 실국장 등을 구성구석 찾아 전북도 중점사업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총력 추진하고 있다.

이날 먼저, 새만금개발청 김형철 차장을 만나, 현재 새만금사업의 도내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고할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제도개선'과 새만금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산단 국가산단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과 면담을 통해 전북과 충청권 연결 도로망을 구축, 교통체증 해소 위한 '무주~설천(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 건설사업'과 '화산~운주 국도 개량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규격사와 규격버튼 아니라 노획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개선을 위해 '임실~장수 국도 건설사업', '소양~진안(소태정) 국도 개량', '부안~홍덕 국도 건설사업'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권덕철 기초실장을 찾아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부지에 노후준비법 시행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NPS 복지플러스 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재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수목원 조성', '소리(k-sound)창조 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용 융복합제품사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매년 AI 발생으로 살처분 비용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김제 용지의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축산환경개선사업'의 효과성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김갑수 기초실장, 이우성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적 음악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소리창조(K-sound)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올해 '지역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전북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사업' 및 전북과 충남내륙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5월에도 지휘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해 국가사업으로 필요 요건, 우리지역의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 정부예산 편성지침 핵심 4대 키워드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정부정책 기조를 전북 현안사업과 연계 마련해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선공약사업 및 정쟁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국회의원들과 사전 협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2018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5.9 대선 개표참관인 공개모집

10일~14일까지... 구·시·군선관위별로 5~15명 이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15개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모집한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임후보할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표참관인 신청은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도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나, 20이상의 구·시·군선관위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공모에 의한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데 각 구·시·군선관위별로 5~15명이 내로 최대 145명이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참관 또는 촬영할 수 있고 투표 효력에 관해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개표위법사항을 발견 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송하진 지사, 4개 게임업체 전북투어패스 구매 전달식

송하진 지사는 4일 2,000만원 규모의 전북투어패스를 구매한 도내 4개 게임업체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구매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달 22일(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구매 전달식에 이은 두 번째다.

게임업체 대표들은 "전북투어패스를 게임 및 지인에게 선물해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구매의 이유를 밝혔다. /인재용 기자

도, 봄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전북도는 날씨가 포근해지며 유원지, 구름다리, 케이블카 등 봄 나들이 인파가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 시·군, 민간전문가, 안전모니터 봉사단,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등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유원사업장 4개소에 대해 구명설비 적정배치 등을 점검하고, 주요 등산로 구름다리 3개소와 케이블카 3개소에도 안전성 여부, 안전요원 배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도, 생산-유통 연계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생산액 500억원 이상 13개 지자체 · 3개 품목광역조직 대상

전북도는 통합적 산지유통정책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분산 추진됐던 정책을 '원예산업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정책 일원화를 도모한다.

그동안 도는 통합마케팅 활성화와 위한 '산지유통 종합계획'과 과수 육성 위한 '과수산업 발전계획' 및 일정규모 재배면적(생산량) 이상의 '주산지 계획'이 개별 추진됐다.

그러나 개별 계획 간의 추진주체 및 일부내용 중복기재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부분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으로 인식되고 있어 도는 산지유통 및 과수·주산지 정책 연계성 강화 및 생산과 유통의 선택

과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지역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원예산업 종합계획'은 원예농산물 생산액이 500억원 이상인 지자체 및 품목광역조직이 대상이다.

전북도의 경우 군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과 3개 품목광역조직(정주로즈프라이,김제 농산무역,부안마케팅)이 계획 수립 대상이다.

계획이 마련되면, 생산과 유통의 효율적 정책 연계가 가능하게 되며, 각종 정부사업 지원에 대한 가점도 부여된다.

전북도는 효율적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2월, 실질적 지역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시·군 및 유통조직이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 선정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한 유통 규모와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생산과 유통이 연계된 사업지원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시·군 및 품목광역조직의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5월까지 수립·보완하고 보완된 사업계획의 추가 컨설팅을 진행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내실 있는 종합적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논·밭두렁 소각 행위 엄중단속

전북도는 연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매년 3월과 4월에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이다. 산불의 약 30%가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 논·밭두렁을 소각할 경우 해당 시군 산림부서나 읍면동에 사전신고 후 산불진화대

원 및 감시원의 입회하에 소각이 가능하며, 마을별 공동소각을 권장한다. 불법으로 신고 없이 무단으로 소각할 경우에는 위반자를 단속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전북도는 불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도내 44개 창업지원기관장이 경제위기 극복과 창업생태계 조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창업지원기관장, 경제위기 극복 머리 맞대

전북창조경제협의회 개최

도내 44개 창업지원기관장이 경제위기 극복과 창업생태계 조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에 따르면 4일 경제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창조경제협의회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창조경제협의회 의장인 진흥 정무부지사의 주재로 열렸으며 센터가 추진했던 기관 간 협업체계에 대한 설명 후 올해 발전방향과 공동 대응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센터는 주요 추진 사항 보고에서 전북을 성공창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기관들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올해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창업생태계 조성 및 4차 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지역 국가·지자체 출연기관과 지역대학 산학협력단, 지역금융·산업계 등 44개 기관대표가 참석해 기관별 주요 창업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업 추진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진흥 의장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통문화, 농생명, 탄소 산업 등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창업지원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관 등 지역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협의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기관 간 협업체계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희망찬 전북 미래를 이끌어 나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17-533호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1.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사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사

구분	기정	변경(㎡)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총 합 계	822,224,494	-	822,224,494	100.00	-
주 지 역	150,497,709	-	150,497,709	18.30	-
시 지 역	6,910,756	증6,594	6,916,350	0.84	-
읍 지 역	82,677	-	82,677	0.01	-
도 지 역	13,177,107	-	13,177,107	0.39	-
시 지 역	2,224,515	증6,594	2,231,109	0.27	-
읍 지 역	619,269	-	619,269	0.07	-
도 지 역	807,188	-	807,188	0.10	-
읍 지 역	720,936	-	720,936	0.08	-
도 지 역	6,896,800	-	6,896,800	0.84	-
시 지 역	135,970,217	감6,594	135,963,623	16.54	-
읍 지 역	52,171,072	-	52,171,072	6.35	-
도 지 역	32,682,740	감10,962	32,671,778	3.97	-
읍 지 역	51,106,405	증6,368	51,112,773	6.22	-
도 지 역	133,472,639	-	133,472,639	16.23	-
읍 지 역	492,077,146	-	492,077,146	59.85	-
도 지 역	46,177,000	-	46,177,000	5.62	-

나.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용진읍 운곡리 975-89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351	100%	완주군청 및 완주교육지원청 부지의 정형화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 하고자 급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용진읍 운곡리 975-89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611	250%	완주군 유관기관(한국도림공사, 산림조합)의 원활한 이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급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용진읍 운곡리 975-89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1,983	-	-

다.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용진읍 운곡리 975-78번지 일원	96,491	감1931	95,560	완주군 고시 제2009-87호	-
변경	②	공공청사	공공청사	용진읍 운곡리 975-89번지 일원	12,936	감15,602	7,334	완주군 고시 제2012-60호	-

라.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A= 96,491㎡ → 95,560㎡ 간) 931㎡	공공청사(완주교육지원청)의 변경과 도로(중로1-00호) 결정을 위한 부지 계획에 따른 구역 정형화를 위하여 급회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변경하고자 함
②	공공청사	A= 12,936㎡ → 7,334㎡ 감) 5,602㎡	완주교육지원청의 원활한 이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급회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변경하고자 함

마.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사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공공청사①	20% 이하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②	20% 이하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

바.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로 번호	구분	유형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인성	국도 3	1	00	20	국도 44	완주읍 운곡리 975-89번지 일원	-	국도 44

사.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중로 1-00	· 연장 : 44m · 폭원 : 20m · 면적 : 939㎡	공공청사(완주교육지원청)의 원활한 건·용업을 위하여 공공청사(①) 내 개설되어 있는 현상도로를 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열람(의견제출)기간

신문개제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의견제출)장소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행정지원과, 용진읍사무소

4. 관계도서

실용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5일
완 주 군 수